이재명, 민주 충청·영남 순회경선 압승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

충청 88.15%·영남 90.81%

李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1위를 기록,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지인 충청과 영남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을 잘 받아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후보가 합산 88.15%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경선 후보가 7.54%, 김경수 경선 후보가 합산 4.31%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88.16%,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87.32%를 얻었다. 김동연 후보는 권리당원 7.53%·전국대의원 8.43%를, 김경수 후보는 권리당원 4.31%·전국대의원 4.25%를 각각 얻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실시됐다. 충청 경선 권리당원·전국대의원 선거인단 총수는 11만1863명으로, 이 중 6만4730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57.87%다.

권리당원 투표율은 57.62%(선거인단 11만131명 중 6만3460명)였고, 전국대의원 투표율은 73.33%(1732명 중 1270명 투표)였다.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및 대의원 대상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이 후보가 90.81%를 득표했다.

17일부터 나흘간 온라인·ARS 투표에 참가한 민주당 권리당원·대의원 7만3255명 가운데 6만6526명이 이 후보에 투표했다.

2위는 김경수(5.93%), 3위는 김동연(3.26%) 후보가 차지했다.

영남권 총 투표율은 선거인단 10만3352명 가운데 유효투표자 7만3255명으로 70.88%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 경선에 견줘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선거인수는 7만8268명으로 투표율은 60.77%였다"고 말했다.

권리당원은 선거인단 총 10만299명 중 7만1065명이 유효투표해 투표율 70.85%를 기록했고, 전국대의원은 3053명 중 2190명(71.73%)이 투표했다.

권리당원만 떼어놓고 보면 득표율은 이 후보가 5만5948표를 얻어 91.10%로 크게 앞섰다. 김경수 후보는 4020표를 확보해 5.66%를 기록했고, 김동연 후보는 2308표를 얻어 3.25%였다.

전국대의원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1780표로 득표율 81.69%를 나타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가 321표(14.66%)로 뒤를 이었다. 김동연 후보는 80표(3.65%)를 획득했다.

전날 첫 경선인 충청권과 이날 영남권을 합한 득표율은 이 후보 89.65%, 김동연 5.27%, 김경수 5.17%로 집계됐다.

향후 민주당 순회경선은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진행된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권리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9일과 30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 뒤 5월 1일 후보를 확정한다. /김재훈 기자

'민생 회복·정권 교체'

민주 전북자치도당 탄핵 보고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탄핵보고 및 민생회복 결의 대회를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에서 다시 개최했다. 본래 지난 12일 개최하기로 돼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긴급의원 총회로 순연돼 이날 열게 됐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권의 헌법 유린과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그 의미를 도민과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단결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에는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정청래 국회의원(전 수석최고위원), 전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 209명,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연락소장, 주요 정무직 당직자 및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2.3 계엄부터 4.4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까지 122일간, 전북도민과 당원의 활약을 담은 기록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전북 지역 국회의원, 당원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헌정 질서 수호와 민생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의를 밝히고, 향후 정국에 대한 대응 방안과 당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탄핵 추진 과정과 주요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역사적 의미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탄핵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권 교체를 위한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특강으로는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탄핵을 넘어, 민생과 미래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 특강을 통해 탄핵 이후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 앞으로의 민생 회복 및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 후반부에는 이정찬 전북특별자치도당 대학생위원장이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 참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행사의 메시지와 의미를 극대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탄핵 보고대회를 통해 도민과 당원들의 뜻을 결집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의 필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당의 지지기반을 더욱 단단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특고 종사자·중기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보호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3대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7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 체불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고, 채용공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불투명한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을 도모한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제도 밖 노동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운영 여전히 개선 안돼"

이숙자 남원시의원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은 27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운영 과정의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해 수차례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관리 감독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촉구했다.

첫째, 남원시가 민간 투자유치사업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 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에 지급한 데 이어, 개인 채권자가 해당 채무 거래를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실을 초래했고 둘째, 지리산 허브밸리 내 공유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임대 중인 것으로 보이며 셋째, 눈꽃 축제 입장료 수익과 관련한 회계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 요청과 사단법인 운봉○○회가 보유한 자산 4억9,800여만 원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철저한 확인을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 "22일 대광법 공포 따른 후속조치 발표"

이번주 도정 주요 일정 발표… 중앙라이즈위원회·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이 지난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21~25일 도정 주요 일정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근로자의 날 행사, 중앙라이즈(RISE)위원회, 국비 확보 대응 등 21~25일 다양한 현안과 행사를 예고했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1~25일 도정의 주요 행사와 정책 현안들이 집중돼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했다.

22일 오후 2시 도청 기자회견장에서는 대광법 공포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이때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전주와 연접한 시장 군수도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대광법 국무회의 심의 의결 및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도는 24일 국회에서 예정된 조찬 간담회에서 도내 국회의원과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해 도내 주요 현안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 단계 대응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정국 여건 등 추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는 충남과 경쟁 구도 속에서 제2 경찰학교 유치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익산에서는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중앙라이즈위원회가 열린다. 전북도에서도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올해 사업 계획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18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참여기업 결과도 발표된다. 도는 참여기업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과 일정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웹툰 작가 양성 사업에서 전북이 선정된 성과도 발표된다.

25일에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가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 조합원 시상과 함께 한국노총 등 주요 노동계 인사와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에는 청년 미래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바이오산업 추진 현황도 발표된다.

24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는 5월 7일까지 이어지며,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2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추경의 대부분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민생 관련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FTA 피해보전직불금제도 적용 기간 20년으로 연장

민주 이원택 의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17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적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로 수입산 농수산물 가격이 내려가면서 국내 농어업이 입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기준 충족 시 수입량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급 △기준가격을 직전 5년 평균가로 상향 조정 △지급 단가를 기존 95%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실제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11배 이상 급증했으며, 그만큼 현장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도 활용률은 3%대에 그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수입 증가로 농어업인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농어업 보호와 미래 통상협상 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대선 국외부재자 신고 24일까지

전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오는 24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학생·주재원·장기 여행자 등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사전투표 개시일인 5월 28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인 6월 3일 후에 귀국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 후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해당 재외공관 또는 구·시·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데이터센터 지을 때 반드시 국토 균형발전 고려해야'

민주 윤준병 의원,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대표발의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8일,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발전소와의 거리, 국토 균형발전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전력 수요가 한쪽에 집중되고,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환경문제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발전소와의 근접성이나 지역발전 효과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방의 재편과 산업 분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필요한 송배전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